

효과적인 서민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이해당사자 집단심층면접(FGI)을 중심으로*

이 숙현** / 석희정***

본 연구는 서민금융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를 통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현실적인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3회의 표적집단심층면접(FGI)을 진행하였다. FGI는 Krueger(1998)가 제시한 4단계 과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즉, 1단계에서는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회의를 바탕으로, 사전에 개발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반구조화 면담방식 형태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2단계에서는 녹취한 FGI를 전사한 후 서면으로 보완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실무자와 연구진들이 FGI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정책 개발 방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4단계에서 전사한 FGI 진술 내용을 Strauss와 Corbin(1998)의 개방 코딩 형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서민금융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한 현실적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다 효과적인 서민금융사업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_ 서민금융, 금융복지, 질적분석, 자산형성, 표적집단심층면접

* 본 논문은 경기복지재단의 2020년도 정책연구인 '경기도 서민금융정책 전담기관 설립방안 연구'를 재구성하였고, 해당 연구에서 진행한 FGI를 토대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분석을 수행한 결과물임

**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원(주저자)

***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교신저자)

Exploratory Study of the Development for the effective Micro-Credit Practice : Focusing on Focus-Group-Interview

Sukhyun Lee* / Seok Hee Joung**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ffective micro-credit policy and the asset-building program. In order to retract a practical solution, this study went over three focus-group-interviews. The professionals and clients from various micro-credit institutions participated focus-group interviews in this study. This study adapted the four-step methods of analyzing focus-group interviews suggested by Krueger(1998). Therefore, this research formed the questionnaire together with professionals and researchers from Kyunggi-welfare-foundation before proceeding each focus-group-interviews. Secondly, we transcribed the interviews and requested additi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to the participants of focus-group-interviews. Thirdly, researchers and professional went over the in-group discussion time based on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focus-group-interviews. Lastly, we analyzed and summarized data using ‘open-coding’ methods suggested by Strauss&Corbin(1998). The research concludes by suggesting effective micro-credit-policies based on the opinions given by the professionals and clients from micro-credit policy institutions.

Key words _ micro-credit, financial-welfare, qualitative-research, asset-building, focus-group-interview

* Researcher at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First Author)

** Research Fellow Strategic Research Team, Gyeonggi Welfare Foundation(Corresponding Author)

I. 서 론

코로나 장기화로 지속된 경기 침체는,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은 2020년도 가계대출이 1,585조 원에 달하여, 전년도 1,481조 원과 비교했을 때 104조 원 증가했음을 공시하였다(한국은행, 2020a). 특히 저신용등급으로 제1금융권에서 거부 받는 서민들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속한 취약계층은 제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자 할 때 거부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로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금융소외계층 발생이 불가피한 한국은행의 금융구조는 경제적 취약집단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내몰고 있다. 제2금융권 대출금리가 20%에 달하며, 카드회사의 이자율 역시 15%에서 24% 수준이다(최배근, 2020). 대부업체 금리는 24% 이상이지만, 제2금융권 진입조차 불가능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2018년 말 기준으로 262만 명에 이르렀다(최배근, 2020). 기존 선행연구는 금리가 연체율을 예측하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가령,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해 금리, 연체율, 실업률, 경기 선행지수, 산업생산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연구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소득, 실업률, 금리가 영향을 받았으며, 소득과 실업률보다 금리의 예측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위정범, 백홍기, 2008). 2000년도부터 2003년도 국민은행 자료를 사용해, 연체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심종원, 정의철, 정현정, 2009), 가계일반자금계정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과 대출금리가 주택자금계정에서는 소득대비 상환금 비율,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 대출금리, 순 금융부채 그리고 맞별이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금리와 연체확률의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나라 높은 금리는 7등급 이하 가계신용대출자의 연체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KCB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90일 이상 연체 혹은 CIS 신용도판단 공공정보 등록 경험을 불량으로 정의해 조사한 결과, 6등급 이하 신용등급 계층에게서는 불량률이 모두 5% 미만으로 나타난 반면, 7등급, 8등급, 9등급 그리고 10등급의 불량률은 각각 8.0%, 12.6%, 45.6% 그리고 79.5%로 나타났다(선택희정 외, 2020). 특히, 8등급의 불량률과 비교했을 때, 9등급과 10등급의 불량률은 각각 4배와 6배 정도 8등급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융소외계층의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고자 정부와 지자체는 저금리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서민금융사업을 시행하였다. 중앙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주축으로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햇살론17 그리고 바꿔드림론 등의 상품을 통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및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을 포함한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였다(금융위원회, 2018.12.21.).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독립적으로 의정부에 채무조정, 소액대출, 법률 및 일자리 상담 그

리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센터인 경기서민금융복지 중앙센터를 의정부에 개소하여, 중앙정부와 독립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경기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2021). 경기도는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통해 대출이 불가능한 7등급 이하의 극저신용자에게 연 1%의 저금리로 이자부담을 최소화한 생계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경기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금융소외집단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정책 개발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은 여전히 소외당하고 있다. 부유층은 대출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담보를 통해 저금리로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취약집단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일반 금융시장에서 대출을 거부당하여,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서도 7등급 이하 집단은 배제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4대 정책금융상품에서 지원받는 비율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은 61.9%인 반면, 8등급 이하는 9.2%로 6등급 이상 지원비율에 비해 7분의 1수준 정도에만 머물렀다(석희정 외, 2020). 사금융과 서민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금융소외계층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이용자가 54.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배준식, 2013). 서민금융제도 신청 후 거절당한 경험에 대해 거절 사유를 분석한 결과에서, 거부당한 이유로 신용등급이 35.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소득 조건(33.2%) 그리고 재직기간(17.4%) 순으로 나타났다(곽민주, 2020).

서민금융이 다른 복지영역과 비교하여, 유난히 사회적 약자가 배제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계에서조차 서민금융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민금융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구정한 외, 2016, 김혜연, 2014, 배준식, 2013)와 서민금융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손상호, 2016, 송재일, 2017, 이재연, 2018, 최철, 2019, 홍완엽, 2018)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당 연구들은 현재 서민금융정책이 가진 한계로 신용등급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원스톱 체계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 홍보 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기관 실적 등을 분석해 수치로 제공하는 데는 이바지했으나, 서민금융 기관 종사자와 이용자와의 더욱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깊이 있는 자료와 의미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복지학계에서 연구가 소홀히 이루어진 서민금융에 대해 표적집단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여, 의미 있는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표적집단심층면접은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로 짧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연구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때 주로 이용하는 질적 연

구방법으로 알려져 있다(Bryman, 2004). 본 연구는 종사자와 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총 3회에 걸친 FGI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FGI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1개 지역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FGI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회의 진행에 앞서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 서민금융 지원 중앙센터 종사자들이 모여 사전 질문지를 개발하여 반구조화된 면담방식으로 서민금융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후 인터뷰한 내용을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개방 코딩 방법을 이용해 결과를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서민금융 관련 주요 이론 고찰

금융포용이란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에게 적절한 비용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성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과정”(Joshi, 2011)에 해당한다. 포용금융의 목적은 금융소외계층의 단기적인 채무 해결에만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 지원과 현재 고통받는 경제적 위기상황 극복에서 더 나아가, 창업과 같은 장기적인 경제활동 및 재무계획을 통해 재기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Corrado & Corrado, 2017).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포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하여,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민금융이란 저신용과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민금융의 주 지원대상은 소득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실업자가 해당한다(홍완엽, 2018). 신용등급 측면에서 서민금융 수혜대상자는 주로 6에서 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와 극저신용자가 포함된다(홍완엽, 2018). 발달과정 관점에서 서민금융 개념을 살펴보면, 서민금융은 1970년대 방글라데시, 브라질과 같이 금융정책이 형성되지 않은 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로 생계와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 사업에서 출발하였다(곽민주, 2020). 이후 1980년대에 이르러 인도네시아 국영은행(BRI),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그리고 남미 ACCION과 같이 성공사례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로 도입이 확산하였다(이기문, 2018). 국내는 1963년 2월 서민의 생활안정과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국민은행을 서민금융 전담기관으로 설립하면서 출발하였다(곽민주, 2020). 서민의 생

활안정과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도입된 서민금융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서민금융은 국가의 포용적인 경제 성장에 촉매제 역할을 한다. 포용적인 경제 성장이란 노동, 자영업, 자산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전 국민의 기회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 성장을 말한다(Barro, 2000; Rajan & Zingales, 2003). 특히 서민금융은 일반 금융시장에서 꺼리는 저신용자, 저신용자 그리고 소규모 창업자에게 자본을 공급하여,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Corrado & Corrado, 2017). 서민금융의 시초인 소액신용대출(micro-credit)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액신용대출이 새로운 직업 창출과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 특히 취약층 중에서도 여성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였다(Banerjee et al. 2013; De Aghion & Morduch, 2005). 가계부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한 선행연구는 가계부채가 사회충격에 미치는 요인으로 주거, 건강, 금융, 고용, 교육, 소비, 관광업, 법률 등을 포함한 16가지를 제시하여 각각의 요인이 충격에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도식화하여 나타냈다(Lane, 2016). 해당 연구는 가계부채가 단순히 경제적인 채무 부담에서의 압박감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고용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서민금융은 부채상환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노대명 외, 2017). 빈곤층에게 과중 채무는 채무상환에 소비되는 지출을 높여, 생활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제약해 극도의 결핍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노대명 외, 2017).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가계부채와 자살 생각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연구는, 사채나 카드빚으로 중장기 부채 부담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의 자살 생각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이윤정, 송인한, 2015; 박정민, 오육찬, 구서정, 2017). 동일 선상에서 한 선행연구는 채무상환 압력은 심리적 긴장도를 높여, 불안감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함을 제시하였다(Clerc, 2003).

서민금융은 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허용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지원한다. 부채상환 부담에 대해 고소득층은 다른 비용을 절약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기본 욕구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박정민, 이승호, 2017). 기존연구에서 2012년과 2014년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을 이용한 대출자와 대조군의 카드소비액을 비교한 결과, 대출 이전에는 서민금융 이용자와 미용자의 소비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지만, 대출 후 이용자의 카드 소비가 한 달 전과 비교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증가해 미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난다. 해당 연구결과에 대해, 저신용층의 자금압박이 경감되어 생활 수준이 향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오윤해, 2020).

서민금융은 취약계층이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삶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돋는다. 서민금융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채무조정은 채무자들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하는 채무를 해결해준다. 채무는 교육 수혜, 저축, 건강 행위와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장애물 역할을 한다. 가령, 여러 기존연구는 부채가 \$10,000 이상일 때, 대학 생활을 지속하고 졸업할 확률이 낮음을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통해 제시하였

다(Elliott & Nam, 2013; Zhan, 2006). 동시에 부채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자산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Elliot, Grinstein-Weiss & Nam, 2013a) 부채가 많은 학생일수록 은퇴계좌를 더 적게 만든다는 점을 보여주었다(Elliot, Grinstein-Weiss & Nam, 2013b). 취약계층이 부채로 인해 형성하지 못한 자산은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부정적인 효과를 끼칠 뿐만 아니라, 부부와 자녀 관계, 사고체계를 포함한 미래 삶 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가령, 자산복지효과이론을 개발한 Sherraden(1991)은 “소득은 굶주린 배를 채우지만, 자산은 삶에 관한 생각을 바꾸게 한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자산복지효과이론을 통해 자산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구의 안정성(이숙현, 한창근, 2021; Rothwell & Han, 2010), 미래지향적인 태도(Bynner & Paxton, 2001), 자산증대효과(Johnson & Sherraden, 2007), 전문성 향상(이숙현, 2016), 위험 감수를 위한 기반(Zhan, 2006), 자기효능감(Scanlon & Page-Adams, 2001), 사회적인 영향력(Pandey, 2003), 정치 참여 증대(Sherraden, 2014) 그리고 후세대 복지(Han, Rothwell & Lin, 2012)를 포함한 9가지로 제시하여 자산이 삶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사회, 심리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호르몬은 건강 행위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지속에도 관여하므로(박원명, 민경준, 2012) 부채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은 건강 행위 저하로 이어질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총자산에 부채를 뺀 순자산과 건강 행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연구는 금연, 운동, 고른 영양섭취, 건강검진, 병·의원 이용 그리고 치과 진료를 포함한 6개 영역의 건강 행위가 자산이 많은 노인에게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 건강한 노년을 보낼 기회와 역량이 높음을 보여주었다(이숙현, 한창근, 2021). 동일 선상에서 선행연구는 건강위험 행위에 소득 단일요인만이 미치는 영향보다,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Drentea & Lavrakas, 2000).

2. 서민금융상품 검토

서민금융은 크게 지원방법, 공적·사적 영역 그리고 자금용도 세 가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지원방법에 따라 서민금융은 햅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과 같은 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채무조정 방식에 따라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파산 그리고 개인회생 등이 포함된다. 서민금융지원제도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분류되는데, 공적인 지원제도에는 바꿔드림론, 햅살론, 미소금융, 파산, 개인회생 등이 있으며, 사적 지원제도에는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새희망홀씨 등이 해당한다. 자금 용도에 따라 생활자금을 주 용도로 하는 제도에는 햅살론(근로자)과 생희망홀씨가 해당한다. 운영자금과 창업자금을 주 용도로 삼는 경우는 햅살론(사업자), 새희망홀씨, 미소금융이 있으며, 고금리대환이 주 용도인 경우는 햅살론(대환대출),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이 있다.

2013년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된 후 2014년 7월 최종적인 개편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서민금융지원체계의 정비와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편방안으로 종합적인 서민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을 통합하고, 서민금융상품 운영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서민금융 질적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서민금융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상품을 개선하고,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개편,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정비 그리고 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016년 3월에는『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함에 따라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채무조정 등에 대해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법제화를 통해 채무조정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채무조정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협약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채무조정절차, 방법, 효력 등도 의무화시켰다. 동시에 원스톱-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 상호업무 위탁을 허용함에 따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2017년 말 기준 전국 31개 지역에 설치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 서민금융지원제도는 크게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는 서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공공기관(신용회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근로복지공단, 도시주택기금, 한국장학재단 등)과 금융회사를 통해 저신용, 저소득자인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자금, 사업자금, 주거안정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출하거나 특례 보증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서비스다. 비금융서비스는 구직자에게 취업 알선,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천규승, 2018).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이 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 주로 창업과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보증·무담보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상품이다. 미소금융은 2008년도에 가장 처음 도입된 제도로, 보험금과 휴면예금, 대기업 그리고 시중은행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이영련, 2015). 새희망홀씨는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작아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 심사기준을 제공하여 대출해 주는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을 말한다. 새희망홀씨는 은행이 자체 수익을 바탕으로 대출을 지원한다(곽민주, 2020).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서민금융상품에 해당한다. 햇살론은 금융기관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근로자 햇살론)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사업자 햇살론) 보증을 통해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및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햇살론 상품은 창업 및 운영자금과 생계자금으로 나뉜다. 햇살론은 저소득과 저신용 농림어업인을 위한 창업, 운영자금을 보증부 대출하며, 그 외 저신용·저소득 대학생과 청년(만 29세, 군필자 만 31세 이하)에게 고금리 전환 대출 및 생활자

금을 지원하는 은행권 대출(신용회복위원회 보증) 상품으로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운영하고 있다.

〈표 1〉 서민금융지원제도 내용

금융서비스							비금융 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				민간사업 수행 기관	지역신용 보증 재단	은행	서민금융 진흥원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기타	미소금융사업	햇살론	새희망 홀씨	—
자영업자	취약계층	근로자			사업자	사업자		—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 긴급생계	대학생·청년햇살론 취업성공대출 교육비지원대출 취약계층자립자금 취약계층임차보증금 취약계층교육비	생계자금 긴급생계 대환자금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바꿔드림론 소액대출 안전망대출	미소드림 적금 소액보험	창업지원 신용회복지원 사회적기업 전통시장 지원	운영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 등	취업지원 금융교육 컨설팅 맞춤대출 종합상담 복지연계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2019). 정책서민금융, 앞으로의 과제,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표 2〉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

상품명	용도	공급처	금리	지원요건
미소금융 (2008~)	창업·운영	미소법인, 민간 등	4.5%	차상위계층 또는 6등급 이하
새희망홀씨 (2010~)	생계	은행	10.5% 이내	
바꿔드림론 (2008~19)	대환	은행		
햇살론 (2010~)	근로자생계 (사업운영)	상호금융, 저축은행, 진흥원	10.5%이내	6등급 이하(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등급과 무관하게 3,500만원 이하
햇살론17 (2019~)	생계	은행, 통합지원센터	17.9% 성실상환우대	

출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2018. 12. 21)

〈표3〉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 차이 단위

(단위: 천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소금융	2.6	3.2	3.8	4.2	4.6	28.2
햇살론	19.7	19.3	22.1	22.1	33.5	155.4
바꿔드림론	6.2	2.1	1.2	1.3	0.7	26.9
새희망홀씨	19.0	19.6	19.6	22.7	30.0	164.8
합계	47.5	44.2	46.7	50.3	68.8	375.3

출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2018. 12. 21)

3. 서민금융상품의 문제점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민금융은 여전히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낳는 요인으로는 높은 금리와 신용등급 제한, 서민금융상품의 홍보 부족, 낮은 접근성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가 부재한 데 있다.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 후 서민금융제도가 개선해야 할 점을 조사한 결과 더 낮은 이자율(41.3%), 자격요건 완화(28.8%) 그리고 간편한 절차(15.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공급확대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금융소외계층을 해결하는 데는 여전히 공급이 역부족한 현실이다(최철, 2020). 한국은행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 기간 동안, 가계대출에서 각각의 신용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신용(1~3등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중신용(4~6등급)과 저신용(7~10등급)은 지속해서 감소했음을 밝혔다(한국은행, 2020b). 경기도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을 지원하고자 50만원 무심사 대출과 300만원 심사 대출로 이원화한 극저신용대출사업을 진행하였다. 1차 극저신용대출사업은 총 36,607건 2차 극저신용대출사업은 총 15,877건 신청하였으나, 신청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무심사로 지원받을 수 있는 50만원만을 지원받아(최조순, 홍서인, 2020) 지원 규모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해, 생활비 정도로만 사용 가능할 뿐 실질적인 삶의 개선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극저신용대출사업을 신청한 목적을 신청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89.7%가 생활비 충당을 목적으로 함이 조사되었다. 동시에,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김희연 외, 2020) 연구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무심사와 심사 대출을 받은 사람 중 대출 후 정신건강과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한 사람 6명을 선발해 면담하였다. 해당 연구는 정신건강이 악화한 요인이 적은 대출 금액 액수에서 비롯했음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정책성 서민금융 영역에서 조차, 여전히 소외되는 8등급 이하 극저신용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 마련해야만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민금융 기관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 지역에 따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50여 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1개의 중앙센터와 11개의 지역센터를 통해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였다(석희정, 송진섭, 고은새, 2021).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역에 설치하였지만, 서울과 경기권에 보다 집중해 있어,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서민금융 기관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령,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지역별 이용 비중을 살펴본 결과, 양평군, 가평군 그리고 가천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세 지역은 경기도 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면적이 넓으면서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모두 설립되지 않은 공통점을 보였다.

서민금융은 단기적인 채무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를 보이나, 장기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가령, 한국금융연구원은 채무조정만 이후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공격과 사적 채무조정 모두 채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생활해 채무조정 이후에도 다시 대부업 대출을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구정한, 이규복, 2020). 심지어 한국금융연구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자가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 회생 이후에도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예도 종종 나타나고 있음을 덧붙였다(구정한, 이규복, 2020). 동시에 서민금융상품 효과성을 2016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KCB 데이터를 이용차분기법(DID)을 이용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대조군을 비교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결과는 서민금융 정책상품이 단기적인 효과만 있음을 실증적인 통계 결과로 보여주었다(오윤해, 2019). 구체적으로, 햇살론 이용자의 대부업 대출 이용확률이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시점에는 미용자 대조군과 비교해 1%로 낮았지만, 햇살론 대출 후 6개월, 1년 그리고 2년 이후에는 오히려 각각 5%, 8.5% 그리고 12.4% 더 증가하였다. 햇살론 이용자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도 동일한 패턴으로, 대출 1년 후에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미이용자보다 증가율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 햇살론뿐만 아니라 새희망홀씨 이용자에게서도 대출 2년 이후, 대부업 이용확률이 미이용자보다 이용자에게서 2% 더 증가하였으며, 저축은행 신용대출량은 47만원 더 증가하였다(오윤해, 2019).

또한 맞춤형 종합상담기능 부재로 장기적인 재기 발판 마련에는 한계를 보인다. 통합지원센터는 대부출상품(햇살론, 미소금융 등),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행복기금 등) 등 제공 서비스별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요자가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능상 분절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통합지원센터의 서민대출상품을 인지하고, 신청한 고객에 한정해서만 수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상담도 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에만 한정되어 종합적인 재무 진단과 고객 맞춤형 처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전체적으로 침해되어, 다양한 복지사업 연계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민금융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높은 채무로 인한 압박감,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위태로운 가족관계, 기본적인 생활비 부족 등으로 삶의 전반에서 기본 욕구가 억압된 상태이다. 파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심리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이 예상되는데,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청 정보를 조사한 결과, 채무자들이 구제제도를 결정하는데 경제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 사회적 비난과 같은 간접 비용도 구제제도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창균, 2008). 기존연구는 과중 채무가 심리적 압박을 넘어, 생활 태도와 노동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살 생각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노대명 외, 2017). 동시에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자 직업을 분석한 결과 무직이 20,526건(50.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단순노무

7,030건(17.2%) 그리고 서비스직 4,402건(10.8%) 순으로 나타나, 과반수가 직업이 없음이 발견되었다 (석희정, 송진섭, 고은새, 2021). 이처럼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자의 경우 일자리 연계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며, 일자리 연계는 재기와도 연관된 매우 중요한 복지 욕구에 해당해 해결이 시급하다. 이처럼 서민금융복지지원 이용자들의 정신건강, 일자리 및 다양한 복지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연계사업이 구상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민금융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종사자와 이용자를 모두 FGI 대상에 포함하였다. FGI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며(Bryman, 2004), 연구주제를 자세히 논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rueger & Casey, 2000). 본 연구는 Krueger(1998)의 FGI 분석 4단계 과정을 적용하여, 개방코딩 형태로 분석을 범주화하였다. 서민금융정책 개발을 위해 실제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서민금융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친 FGI를 진행하였다. 1차 FGI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5개 경기서민금융복지 지역센터에서 서민금융 상담업무를 맡은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차와 3차 FGI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총 3회에 걸친 FGI는 각각 1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FGI 수행 전, 선행연구 검토 및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 중앙센터에서 일하는 실무자들과 경기복지재단 연구진 및 서민금융 자문위원들을 통해 사전 질문지 내용을 구상하였다. FGI 이후 연구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전화 및 서면 형식의 피드백을 종사자와 이용자로부터 받았다. 총 3회간 이루어진 FGI에 참여한 참여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종사자는 모든 지역센터가 참여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제시하였다. FGI에 참여한 참석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참석자 명단

	성함	연령	대상
1차 FGI	종사자1	비공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종사자
	종사자2	비공개	
	종사자3	비공개	
	종사자4	비공개	
	종사자5	비공개	
	종사자6	비공개	
	종사자7	비공개	
	종사자8	비공개	
	종사자9	비공개	
	종사자10	비공개	
	종사자11	비공개	
2차 FGI	이용자A	54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자
	이용자B	61세	
	이용자C	82세	
	이용자D	74세	
3차 FGI	이용자E	54세	
	이용자F	50세	
	이용자G	56세	
	이용자H	58세	

2. 분석방법

효과적이고 표용적인 서민금융정책 개발을 위한 본 연구는 Krueger(1998)가 제시한 FGI 4단계 과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1단계에서는 사회자가 사전에 선행연구 및 실무자와 연구진 검토를 거쳐 준비한 사전 질문지와 질문 외에도 추가적인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반구조화 면담식으로 진행하였다. 2단계에서는 녹음한 FGI 내용을 전사한 다음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전화를 통한 구두 및 이메일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정보를 보완하였다. 3단계에서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 중앙센터 실무자와 경기복지재단 연구진들이 모여 회의 내용을 논의하였다. 4단계에서는 전사한 FGI 내용을 분석하면서 정리하였다. 다음은 위의 4단계를 거친 후 Strauss와 Corbin(1998)의 개방코딩 형식을 이용해 정리한 FGI 내용이다.

3. 연구결과

〈표 5〉 FGI 분석을 통한 범주화

영역	범주	하위범주
서민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보편적인 혜택 제공	서민금융 대상자 확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상품 확대
	서민금융상품 홍보	홍보를 통한 서민금융상품 접근성 제고
	서민금융 접근성 강화	서민금융 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 도입	노년층을 위한 서민금융 대리 진행 서비스
단기적인 채무 해결에서 나아가 장기적인 재기 발판 마련	금융교육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금융교육 실시
	안심 통장	통장압류자를 대상으로 안심통장사업을 개발해 근로의욕 고취
다양한 복지사업 연계를 통해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	복지사업 연계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사업 연계
	정신건강 지원	정신건강 상담을 통한 위기상황 지원

1. 서민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보편적인 혜택 제공

1)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상품 확대

금융시장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7등급 이하 신용등급에 속한 경제적 취약계층은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도 이용하기가 힘들다. 본 연구는 기존 서민금융상품 문제점으로, 4대 정책금융상품에서 지원받는 비율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은 61.9%지만, 8등급 이하는 9.2%로(석희정 외, 2020), 사금융뿐만 아니라, 정책 서민금융에서도 신용등급에 따른 금융소외계층이 발생함을 설명한 바 있다.

“**‘신용등급만 보고 제한하기보다는 일할 능력과 사업능력을 평가하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시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돋는게 필요해요. 자금 대출 시 신용등급만 보는게 아니라 사업계획서와 같이 능력도 평가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이용자A〉

“**‘미소금융 쪽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알아봤는데 등급을 보시더라고요. 은행 문턱이 너무 높고 서류 요구하는 것도 달라 서민이 다가가기 힘들었어요. 솔직히 서민들이 다가가서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힘든 사람들에게는 이율이 더 세고,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이율이 약하니 돈을 받아 돈놀이를 하는데… 악용하는 사람도 많아요’**”〈이용자H〉

2) 홍보를 통한 서민금융상품 접근성 제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홍보가 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대부분 어려울 때 주민센터를 먼저 찾아가는데,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센터 직원이 거의 없었음을 안타까워하며 홍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보를 많이 하면 어떨까 생각해 주변 사람을 소개해드렸어요. ‘한시라도 빨리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이용자H〉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오니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어려워요. 수많은 파산면책 상담을 알아봤지만, 왜 시도를 못했냐면, 막상 상담을 받으면 상담 지식만 쌓일 뿐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주는 곳이 아무 곳도 없었어요. 좌절하고 우울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통장도 압류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때 주변에서 동사무소로 가보라 했어요. 저는 다행히 동사무소에서 연결해주셔서 올 수 있었어요’**〈이용자F〉

“**‘겪고 와서 생각해보니,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오니 ‘이를 해결해주는 곳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상담만 해주고 직접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았는데, 저는 여태 몰랐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열 균데 모두 상담만 해줄 뿐이지. 이런 게 있었는데, 왜 나는 몰랐고, 나라에서는 왜 광고를 하지 않지? 싶었어요. 사실 이런 일을 겪으면 상담은 말뿐이고, 직접 해결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런 제도를 놓고 광고를 하지 않는지, 이러이러한 지원을 받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광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이용자F〉

“**‘사실 서류 복잡한 건 문제 되지 않아요. 하면 하는 거지. 못 와서 못하는게 문제인 거에요. 올 수 있게끔 불러 들어야 알고 오는 거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상담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봤자 상담일 뿐이라면서 안 와요. 그러므로 직접 해결해준다는 것을 광고해줘야 하고. 돈에 대한 부담감이 모두 있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없다는 것을 홍보해야 해요. 누구라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하면 무료로 해결해준다는 것을 알려야 해요.’**〈이용자F〉

“**‘사실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을 잘 만나면 데려다줘요. 설명 없이 연락해보라고 하면 안하는 사람이 많아요. 서민금융센터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게 관건이에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망설여져요. 법률상담을 해야 하니 문턱이 높다고 생각해요’**〈이용자E〉

“변호사, 법무사에게 가면 해결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턱이 높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과 변호비를 빌려서도 가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다는걸 각인시켜야 해요.”〈이용자H〉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시스템이 잘 안 되어있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주민센터에 찾아가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줘요. 복지기관 현장에 있는 분들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해 줄 수 있어야만 해요. 서로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주민센터인데 막상 찾아가면, 업무를 열심히 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면 공무원들도 아는데, 보통은 그냥 공식적인 업무만 해줘요. 공식적인 지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이용자B〉

3) 서민금융 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강화

2021년도 5월을 기준으로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의정부 원스톱 센터를 본부로 하여, 수원, 안양, 안산, 고양, 의정부, 구리, 부천, 광주, 용인, 평택, 파주 그리고 남양주센터까지 총 12센터로 운영하고 있다(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2021.07.04). 현재 안양센터에서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을 안산센터에서 안산, 화성, 시흥을 의정부센터에서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을 구리센터에서 구리와 하남을, 부천센터에서 부천, 광명, 김포를 광주센터에서 광주, 성남, 양평을 용인센터에서 용인, 이천, 여주를, 평택센터에서 평택, 오산, 안성을 파주센터에서 파주, 연천을 그리고 남양주센터에서 남양주, 가평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센터 한 개에서 여러 지역을 포괄하여 운영하여 지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담위원에 비해 이용자 수가 많아 심층적인 재무상담이 어려워 개선이 요구된다.

“저는 집이 양주여서 의정부센터로 가요. 거리는 한 시간 정도 걸려요.”〈이용자G〉

“오히려 화성이 더 넓은데 화성은 없는 것 같아요. 화성 쪽에 하나 설치하면 어떨지”〈이용자H〉

“시흥이나 화성 쪽은 인구도 많은 데 없어요. 과거에는 안산에 신도시가 개발돼서 안산 주변으로 들어왔는데, 이를 분산시켜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이용자F〉

4) 노년층을 위한 서민금융 대리 진행 서비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자들의 연령에 따른 상이한 욕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

도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가령, 고연령층은 서민금융 이용 시 필요한 서류발급을 매우 번거워하였다. 반면, 비교적 젊은 중년층은 채무 해결이 문제지 서류준비는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표현하였다. 이로부터 고연령 이용자들은 서류발급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각종 서류발급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세금납부증명서, 부모 사망 증명서까지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서류발급에 따른 불편함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채무 증명서 이런 거 은행 쫓아다니면서 하니깐 오래 걸리더라고요. 직접 은행 가서 서류 가져가려고 하니깐 번거롭더라고요. 전자정보가 사각지대가 아닌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평가위원회를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이용자A>

“법원에서 가져오라는 서류가 있고 그래요. 돌아가신 분들까지 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추심업체 이쪽도 말씀드려보니깐 그렇더라고요”.<이용자B>

“직접 다닐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지 증명서까지 다 가져오라고 하니깐 참 힘들더라고. 본인에 대한 것만 요구하면 좋은데. 우리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이용자C>

“애들 자동차세 이런 것까지 다 떼오라고 하더라고요”.<이용자B>

2. 단기적인 채무 해결에서 나아가 장기적인 재기 발판 마련

1)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금융교육 실시

서민금융정책 상품이 단기적인 채무 경감효과만 나타내며, 대출 2년 이후에는 오히려 대부업 이용확률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액을 늘리는 것과 같이 다시 채무의 덫에 빠지게 함을 논의한 바 있다. 동시에 기존 대출경험이 있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대출경험자에게서 금융 지식이 더 낮고, 저축보다 소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김시월, 2020). 낮은 금융 지식과 저축보다 소비를 지향하는 태도는 우리나라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추세이다. 가령,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1,820명의 금융이해력을 조사한 결과, 금융이해력 평균이 100점 만점에 66.2점으로 17개 OECD 국가 중 9위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금융이해력을 살펴보았을 때는 29세 이하가 62.0

점, 30대 69.9점, 40대 69.9점, 50대 67.6점, 60대 64.2점 그리고 70대가 54.4점으로, 특히 사회초년생과 60대 이상에게서 금융이해력이 낮게 나타났지만, 전 연령대에서 금융이해력 수준은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금융감독원, 2017a). 동시에 우리나라 소비성향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 국민이 저축보다는 소비를 선호해, 미래 재정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2017b). 본 연구 FGI회의 결과에서도 이용자들의 금융이해력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재정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자신의 소비를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서민금융이 단기적인 채무 경감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이용자의 재기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상품 이용에 금융교육 수료를 의무 조건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굳이 이곳을 데리고 와서 소개해줬어요 저는 그냥 갚으면 되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확인을 해봤더니 이자가 붙어서 굉장히 큰돈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이용자D〉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종사자C는 개인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현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재무상담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단기적인 채무 해결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정상적인 활동을 지원해야 함을 덧붙였다. 다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종사자들 역시 서민금융은 현재 채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생을 가능케 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상담사들이 재무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지원이 돼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면 재단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종사자3〉

“필요로 하는 것은 파산이 아니라, 나중에 재귀하기 위한 그림까지거든요”〈종사자1〉

“서민금융은 파산이 아닌 회생이 목적이니깐”〈종사자2〉

2) 통장압류자를 대상으로 안심통장사업을 개발해 근로 의욕 고취

근로활동을 하는 이용자들의 통장이 압류되지 않도록 안심통장사업을 만들어 근로소득 압류로 근로 의지가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기존 서민금융지원사업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많으며, 신용회복이 되더라도 개인파산 기록이 계속 남아 경제적 재기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저신용자들을 위한 저금리 금융대출상품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가 있다.

“일반인들은 급여를 요즘 통장으로 받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보니 안심 통장처럼 통장을 하나라도 압류되지 않도록 해준다면”〈종사자3〉

“현재 압류방지는 안됩니다. 통장 개설은 되는데 채무불이행자는 근로 통장을 개설하면, 은행에 대 부분 압류가 되어있으니, 압류가 안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되는데, 미리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종사자4〉

“기초생계비 185만원 압류금지 이런 건 해놓았는데, 채권자가 법원 판사한테 가면 제삼 채무자가 은행이잖아요. 은행에 압류를 하라고 하면 판사는 다 보지 않습니다. 판사는 서류만 보고 압류를 해버립니다”〈종사자5〉

“압류나 가압류를 해서 일터에서 도태당할 수 있는 불안감이 있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실제 근로의 욕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종사자10〉

3. 다양한 복지사업 연계를 통해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

1)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사업 연계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채무뿐만 아니라, 질병 관리,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 필수영역에서 극히 제한받고 있다. 생활 필수영역에 해당하는 현물 보급은 특히 현금 지원보다 남용 가능성도 적어,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상담 유형별 시계열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설희정, 송진섭, 고은새, 2021), 꾸준한 증가 패턴을 보여주어, 상당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반영하였다. 가령, 복지서비스 상담 건수가 2015년 30건, 2017년 202건, 2020년 57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앞으로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임을 예측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상담유형으로는 2020년도 기준, 긴급복지 및 사회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의 상담 비중이 53.5%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가 29.2% 그리고 일자리가 16.9%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특히 서민금융 이용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기본적인 인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을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저는 임플란트도 받았어요. 서민금융, 아산재단 끌어다가 지원받았어요. 이런 제도권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이용자G〉

“서민금융 기관이 확대된다면,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 추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이용자D〉

“장애인협회, 노인협회에 일자리 연계를 받았어요. 일자리는 많은데, 동사무소에 정보가 있는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르신들에게 알려주고 하지만, 막상 어르신들은 법이 매일 바뀌니까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50이 넘어가니깐 정보를 모르겠더라고요. 기회를 못 찾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회생 같은 경우도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주는데.”〈이용자A〉

2) 정신건강 상담을 통한 위기상황 지원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자가 경제적 어려움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정신건강 상태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여러 기존연구가 일관되게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과 정신건강의 밀접한 연관성을 논의하였다(이숙현, 한창근, 2017). 특히 막대한 채무는 자살사고로도 빈번히 이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국가채무와 자살 관계를 경로 분석을 통해 살펴본 기존연구는, 가계부채비율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에 대한 직접효과가 0.67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보여주었다(이용환, 방희명, 2019). 이에 정신건강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서민금융 이용자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 상담이 가끔 들어오는데,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하고, 경찰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긴박한 분들이에요. 두려움도 매우 크고요.”〈종사자I〉

4. 결론

본 연구는 자산형성사업을 포함한 서민금융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총 3회에 걸쳐 진행한 FGI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고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 지역센터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FCI를 바탕으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상품 확대, 홍보를 통한 서민금융 상품 접근성 제고, 서민금융 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강화, 노년층을 위한 서민금융 대리 진행 서비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금융 교육 실시, 통장압류자를 대상으로 안심통장사업을 개발해 근로 의욕 고취,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사

업 연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통한 위기상황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실천 및 정책적 함의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서민금융상품 홍보를 확대하여, 부채와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주민센터를 찾아가는데, 동네 대다수의 주민센터 종사자들조차 서민금융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금융에 대해 일차적으로 주민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해야만 하며, 동시에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널리 홍보해야만 한다.

이용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자 연령대에 따라 욕구가 다르게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이용자일수록 서류발급과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 및 개선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이용자들은 서류발급은 채무가 해결될 수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연령대가 높은 이용자는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증명서까지 요구하는 현행 절차에 부담감을 표시하였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짊어졌던 이들은, 많은 경우 가족관계가 이미 단절되어, 가족과 관련한 서류발급에 더 어려움을 표시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세금납부증명서, 부모 사망 증명서까지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서류발급에 따른 불편함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 의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소액금융대출상품을 개발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특히 빈곤 계층에게 불리한 구조로, 가난할수록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야만 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현재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고금리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극저신용 대출사업으로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액과 대상이 여전히 역부족한 상황이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금액과 규모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추후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보다 많은 극저신용대출과 같은 사업을 확장해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통장이 암류된 파산자를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 한도 안에서 암류방지 통장 합법화를 확대하여, 근로 의지를 높여야만 한다. 파산한 경우라도 매달 일정 금액은 저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과 같은 각종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윳돈 정도는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다섯째, 금융과 복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복지통합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자체 서민금융센터는 채무조정과 재무상담과 같은 금융서비스에만 치중해있다. 또한 한 명의 상담위원이 책임져야 하는 이용자가 너무 많고, 상담위원의 금융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금융교육이 부족함에 따라, 현재 이용자의 재무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복지사업 연계와 개인 맞춤형 심층 상담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서민금융 원스톱 통합센터를 신설하였다(경기도청, 2021.01). 21년도에 원스톱센터를 신설한 만큼 경기도는 센터가 다양한 복지연계 및 맞춤형 금융상담과 관련한 목표들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FGI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민금융 이용자 중 상당수가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태 역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집단을 국립 및 지자체 정신건강 기관과 연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도 현재 치중한 채무와 대출상품 운용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복지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다차원적 방면으로 서민의 삶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상품을 이용한 사람들이 단기적인 채무 해결 단계에만 머무름에 따라, 장기적인 재기에는 실패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심층적인 맞춤형 재무상담을 정부 차원에서도 마련해야만 한다.

지역별 서민금융센터를 확대하여 서민금융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지역에 따른 서민금융 편차를 줄이기 위해, 광주시, 오산시 그리고 평택시에 센터를 설립한 결과로 해당 지역에서 서민금융 이용자가 급증하였다. 가령, 광주시의 경우 2020년 497건으로 2015년 30건에 비해 16배 이상 증가하였다(석희정, 송진섭, 고은새, 2021). 같은 해 지역센터가 설립된 평택시와 오산시도 2015년 각각 60건, 28건에서 2020년 724건, 332건으로 6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였다(석희정, 송진섭, 고은새, 2021). 이처럼 서민금융 사각지대에 서민금융 공급 기관을 설립할 경우 잠재된 금융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채무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거주민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민금융 이용하는 조건으로 금융교육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와 같이 다수의 세계적인 거부를 보유한 인종인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저금통을 만들며,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1988년에 이미 정부 기관, 금융기관 그리고 비영리 교육단체 등 130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한 JumpStart를 통해, 20여 명의 금융과 교육 전문가와 함께 ‘National Standards in Personal Finance’를 만들어 금융 소비자교육 기준을 마련했다(김미리, 2007). 해당 학습기준은 금융 소비자교육 영역을 자금관리, 소득, 지출과 신용, 저축과 투자 4개 분야로 나뉘, 각 분야에서 학습할 내용과 목표를 제시해, 효과적인 금융교육 학습지침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1년도 10월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최저신용자에게, 최소한의 상환능력 충족 시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전제 조건으로 신용교육 이수를 포함한 바 있다(금융위원회, 2021). 즉, 신용평점 하위 10% 하위 이하인 사람이 해당 서민금융상품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이용자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수해야만 한다(금융위원회, 2021).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의 수혜 자격으로 필수적인 금융교육 시간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인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 능력을 높이기에 역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연령대가 높은 이용자의 경우, 금융교육을 인터넷으로 수강하는 데 어려움

을 가지는데, 지역 서민금융센터에 상담위원으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금융복지서비스(채무조정, 파산, 회생 등)에 대한 정보 부족과 금융복지 관련 교육 부재로 사례관리 대상자의 부채 및 금융피해 등의 욕구와 문제들에 개입하는데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이용자 자립역량 교육은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타 서민금융기관에서도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에 관한 연구가 아직 사회복지학계에서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집단심층면접(FGI) 방법을 활용하여 서민금융정책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민금융에 대한 이론 고찰과 서민금융 관련 기관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수행하여 본 연구는 서민금융이 극저신용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서민금융 홍보를 통해 정보 격차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서민금융과 다양한 복지사업 연계를 통한 서민들의 다차원적인 삶의 질 향상 방안 마련 등을 제고했다는데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져, 추후 연구에서 보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서민금융을 탐색하는 데 있어, 집단심층면접(FGI) 기법을 사용하여, 일반화 가능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 양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계획법, 선형계획분석기법, 제도분석, 체계분석 기법 등을 활용해 정책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심층면접(FGI)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이용자가 모두 50대 이상임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30대와 40대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추후 이들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만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종사자와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여,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성 서민금융 이용 경험을 고찰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금융상품이 유사하나, 보다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집단심층면접 기법을 활용한 추후 연구에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2021.07.04 https://gcfwc.ggwf.or.kr/intro/organization.view?menuId=MENU_00007에서 2021.07.04.에 인출
- 경기도청. (2020.01). 경기도 복지정책과 서민금융복지팀 내부자료
- 곽민주. 2020. 금융소비자의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 특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6(1): 1–22.
- 구정한, 이규복, 김석기. 2016. 국내 서민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 수요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KIP 금융분석보고서
- 구정한, 이규복. 2020. 가계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금융감독원. 2017a. 2016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보도자료 2017.1.23.
- 금융감독원. 2017b.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참여 혁신형 교수용 지도서.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2018.12.21.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2021. 정부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신규 상품도 지속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김미리. 2007.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및 금융소비자교육 요구도 분석.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시월. 2020. 사회초년생의 대출경험에 따른 금융이해력 차이와 금융교육 필요성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51(1): 79–106
- 김혜연. 2014.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참여자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2): 127–153.
- 김희연, 이순영, 이원영, 최윤주, 박은지, 고은새, 이하은. 2020.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소득지원정책의 사회심리 및 정신건강 효과 분석
- 노대명, 박창균, 박상금, 한솔희, 김솔휘. 2017.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 연구: 부채 발생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박원명, 민경준. 2012.『우울증』. 서울: 시그마프레스
- 박정민, 오옥찬, 구서정. (2017). 가계부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과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9(2), 171–190.
- 박정민, 이승호. (2017). 가계부채와 기본적 욕구 결핍의 관계: 생계, 건강, 주거 차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4(2), 87–110.

- 박창균. 2008.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 선택에 관한 실증 분석. 경제학연구 56(4): 53–88.
- 배준식. 2013.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지원 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48. 1–19.
- 서민금융진흥원. (2019). 정책서민금융, 앞으로의 과제.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 석희정, 박선종, 이상철, 최충익, 이숙현. 2020. 경기도 서민금융정책 전담기관 설립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석희정, 송진섭, 고은새. 2021.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자 특성 분석. 경기복지재단
- 손상호. 2016. 서민금융의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정책보고서
- 송재일. 2017.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선. 협동조합경영연구 46, 1–48.
- 심종원, 정의철, 정현정. 2009.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15(2), 81–96.
- 오윤해. 2019.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행태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오윤해. 2020.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 위정범, 백홍기. 2008. 금리정책과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 한국기업경영학회 15(2), 17–40.
- 이기문. 2018. 서민정책금융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현, 한창근. 2017. 노인의 자산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복지정책 44(3): 99–123.
- 이숙현, 한창근. 2021. 노인의 자산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 부부관계만족도와 자녀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68(1), 147–183.
- 이숙현. 2016. 노인의 자산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련. 2015. 한국의 서민금융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미소금융을 중심으로. 노동연구 30, 80–138.
- 이용환, 방희명. (2019). 국가채무가 자살에 이르는 경로분석. 한국콘텐츠학회 19(8): 535–543.
- 이윤정, 송인한. (2015). 자살과 연관된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부채와 자살생각.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1): 58–82.
- 이재연. 2018. 시장서민금융과 정책서민금융의 역할 정립을 통한 지속가능 서민금융체계 구축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천규승. 2018. 서민금융지원제도 운영 실태 및 발전 방향. 금융교육연구 3, 1–22.

최배근, 2020. 기본대출은 금융민주화의 출발점.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OCUS

최조순, 홍서인(2020).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신청자 특성 분석 및 개선방안. 경기복지재단

최철. 2019. 우리나라 가계 대출 수요와 서민금융 정책 방향. 금융소비자연구. 9(1): 91–112.

최철. 2020. 포용적 금융과 최고금리 규제의 역설. 소비자문제연구 51(3): 161–179.

한국은행. 2020a. 2020 연차보고서

한국은행. 2020b. 금융안정보고서

홍완엽. 2018. 서민금융 개선을 위한 정책적 입법 과제 연구. *비교법연구* 18(1): 265–299.

- Banerjee A, Chandrasekhar AG, Duflo E, Jackson MO: The diffusion of microfinance. *Science* 2013, 341:363–371.
- Bryman, A. (2004). *Social Research Metho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Bynner, J. M., Paxton, W. (2001). The Asset–Effect. Lond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Clerc, D. (2003). Endettement, Maux et Bienfaits. *Revue Projet*, 2003/3, n.275, 78–84.
- Corrado, G., & Corrado, L. (2017). Inclusive finance for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Current opinion i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24, 19–23. de Aghion AB, Morduch J: *The Economics of Microfinance*. Cambridge, MA: MIT Press; 2005.
- Drentea, P. & Lavrakas, P. J. 2000. Over the Limit: The Association among Health, Race and Debt.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0, 517–529.
- Elliott, W. and Nam, I. 2013. “Reducing Student Loan Debt Through Parents’ College Savings”. St. Louis, MO: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CSD Working Paper 13–07.
- Elliott, W., Grinstein–Weiss, M. and Nam, I. 2013a. “Student Debt and Declining Retirement Savings”. St. Louis, MO: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CSD Working Paper 13–34.
- Elliott, W., Grinstein–Weiss, M. and Nam, I. 2013b. “Does Outstanding Student Debt Reduce Asset Accumulation?” St. Louis, MO: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CSD Working Paper 13–32.
- Han, C. K., Rothwell, D. W., Lin, E. (2012). Cash Transfers and Child Well–Being in Singapore: an Exploratory Study of the School Pocket Money Fund.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22(1–2), 36–49.
- Johnson, E., Sherraden, M. S. (2007). From Financial Literacy to Financial Capability among Youth. *Journal of Soc. and Soc. Welfare*, 34, 119
- Joshi, D. P. 2011. Financial Inclusion and Financial Literacy, OECD Seminar Roundtable on the Updates on Financial Education and Inclusion Programmes in India.
- Krueger, R. A. & Casey, M. A. (2000).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 Research(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Krueger, R. A. (1998). Developing Questions for Focus Groups. Thousand Oaks, CA: Sage.
- Pandey, S. (2003). Assets Effects on Women: A Study of Urban Households in Nepal. *Social Development Issues*, 25(1/2), 29–46.
- Rothwell, D. W., Han, C. K. (2010).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ssets and Family Stress among Low Income Families, *Family Relations*, 59(4), 396–407.
- Scanlon, E. & Page-Adams, D. (2001). Effects of Asset Holding on Neighborhoods, Families and Children: A Review of Research. Building Assets: A Report on the Asset-Development and IDA Field, 25–50.
- Sherraden, (2014). Chapter Thirteen Asset Building Research and Policy: Pathways, Progress and Potential of a Social Innovation, In R. Cramer & T. R. W. Shanks, The Asset Perspective: The Rise of Asset Building and its Impact on Social Policy. NewYork: PALGRAVE MACMILLAN
- Sherraden, M. W. (1991). Assets and the Poor. NewYork: ME Sharpe.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 Zhan, M. (2006), Asset, PArental Expectations and Involvement and Children's Educational Performanc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8(8), 961–975.

원 고 접 수 일 | 2021년 7월 7일
1차심사완료일 | 2021년 8월 5일
2차심사완료일 | 2021년 8월 16일
최종원고채택일 | 2021년 8월 20일

석희정 seokhj@ggwf.or.kr

2001년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는 “재혼여성노인의 정체성 상실과 재구성: 서사적 생애사 재구성 작업을 통해 본 정체성의 이중구조탐색”(2013), “거리노숙인들의 생애사 연구”(2014), “Correlates of Adolescent Cyberbullying in South Korea in Multiple Contex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School Practice”(2017), “Understanding internet gaming addiction among South Korean adolescents through photovoice”(2018) 등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장애인복지, 서민금융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질적평가 등이다.

이숙현 holi2007@naver.com

2020년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는 “노인의 자산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2017), “패널자료를 이용한 주거빈곤과 문제음주의 관계분석”(2020), “청년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사회생태학적 결정요인에 관한 데이터마이닝 분석”(2018), 등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자산형성정책, 금융복지, 빈곤과 건강 등이다.